

충남 산업경제의 현황과 추진정책

한무호

산업경제연구부장

1. 서론

세계화, 정보화의 급진전은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과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산업재구조화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1995년 지방자치제도의 출범과 함께 민선3기에 접어들면서 지방자치의 성숙기를 맞고 있다.

지방자치의 실시로 중앙집권체제에서 분권형 국가경영체제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지역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개발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개발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지 못함으로써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하향식개발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에서 지방의 경제는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IMF 이후 국가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정책기조로 삼으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집중투자로 지역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간 불균형은 지식·정보화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지식정보산업이 자본, 노동, 정보 및 중추관리 기능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적하게 됨으로써 지역간 격차는 물론 지역내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에 따른 충남지역내·외의 여건변화와 산업경제 현황, 그리고 산업진흥계획 검토를 통하여 국·내외적인 여건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충남의 산업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2.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1) 환황해경제권 영성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20여년간 10%이상의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

다. 2001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이 1조 1,588억 달러로 세계 7위의 경제규모를 달성하였고, 향후 10년 내에 3~5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6억에 이르는 방대한 중국소비시장의 규모는 1978년 대비 1998년에 23배 증가하였다.

WTO 출범과 중국경제의 개방화로 환황해경제권이 가시화 됨으로써 서해안의 입지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서해안지역은 환황해경제권의 생산기지, 물류중심기지, 산업협력의 동반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 지식기반경제 사회로의 이행

21세기는 세계화, 정보화로 특징지울 수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정보가 유통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과 과학기술의 결합으로 새로운 형태의 기술혁신, 기술의 네트워크화, 지능화가 가속화되어 모든 산업과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정보기술이 응용되고 지식과 관련된 신제품과 신시장이 확대됨으로써 생활양식의 다양화와 경제사회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의 혁신은 지식 및 정보의 획득비용 감소, 기술혁신의 순환주기 단축, 지식을 활용한 제품수요의 증가 등 생산체계의 변화와 함께 공급자 중심의 시장구조에서 수요자 중심의 시장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지식기반경제는 지식과 정보의 창출, 확산, 활용이 모든 경제활동에서 핵심이 되고 있으며, 국부창출과 기업 및 개인의 경쟁력 원천이 되고 있다. 즉,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식은 정보와 인적자원이 결합될 때 생산적 역할을 하게되며, 기술은 기계에 내재되기보다는 인간에 내재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기반경제의 경쟁력은 결국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와 이들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있다.

3) 세계화와 지방화의 성숙

동서 냉전시대의 종식과 WTO 뉴라운드의 출범에 따른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의 도래로 기업활동의 범세계화가 더욱 촉진되고 있다. 세계화란 과학기술의 진보, 교통·통신수단의 발달과 정보화의 진전으로 시간거리의 현저한 단축과 시장규모의 범세계화 등으로 인류의 상호의존성이 급격히 증대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와 함께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지역 및 도시의 역할이 각 분야에

서 더욱 중요해지는 지방화도 동시에 진전됨에 따라 지역 스스로의 책임과 권한을 바탕으로 지역여건과 특성을 살린 자율적인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세계화와 지방화는 세계경제질서하에서 외국과의 경쟁과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각 지방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 발전하려는 지방간의 경쟁을 동시에 의미하며, 또한 지방화는 분권화, 다양화를 의미한다. 이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그리고 국민 등 모든 주체에게 경쟁력 강화란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으며,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역할이 증대됨을 의미한다.

3. 충남 경제현황 및 문제점

1) 산업구조

2000년 현재 충남의 산업별 취업구조를 살펴보면, 농림어업 35.3%, 제조업 14.5%, 도소매및음식숙박업 20.2%, 금융운수업등기타가 6.9%로 농림어업의 비중이 감소되고 있으나 전형적인 농림어업 중심지역으로 나타난다.

[표-1] 충남의 산업별 취업구조

(단위 : %)

구 분		1992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전국	농림어업	15.8	12.4	11.7	11.3	12.4	11.6	10.9
	광업	0.3	0.1	0.1	0.1	0.1	0.1	0.1
	제조업	25.5	23.5	22.5	21.2	19.5	19.8	20.2
	건설업	8.7	9.3	9.5	9.5	7.9	7.3	7.5
	도소매음식숙박업	23.3	26.3	27.1	27.5	27.9	28.2	28.2
	공공 및 서비스업	17.7	19.2	19.8	20.9	22.3	23.3	23.4
	금융운수등 기타	8.6	9.1	9.3	9.5	10.0	9.8	9.8
충남	농림어업	47.8	42.3	39.8	38.8	40.3	37.4	35.3
	광업	0.2	0.2	0.3	0.4	0.0	0.1	0.1
	제조업	13.4	13.2	13.5	12.9	12.8	12.6	14.5
	건설업	6.3	7.3	7.5	7.9	6.6	6.4	6.4
	도소매음식숙박업	16.0	18.6	19.3	19.7	18.2	19.9	20.2
	공공 및 서비스	11.2	12.3	12.6	13.5	15.3	16.7	16.5
	금융운수등 기타	5.0	6.3	6.7	6.7	6.9	6.8	6.9

자료 : 통계청, <http://www.nso.go.kr>.

제조업은 전국에 비해 1차 산업의 비중이 높고, 금융, 물류·유통 등 생산자 서비스업의 비중이 낮아 취약한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제조업의 91%가 종업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중소기업기업의 90%가 종업원 50인 미만의 소기업이다.

충남의 특화산업은 음식료품(1.55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2.085), 코크스, 석유제 제품(2.087), 화합물 및 화학제품(1.516), 고무 및 플라스틱(1.182), 비금속광물제품(1.044), 조립금속제품(1.04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품(1.806) 등 8부문으로 지식기반제조업은 성장하고 있는 반면 전통제조업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의 업체가 천안, 아산, 논산, 금산, 공주 등 동부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벤처기업의 경우는 천안, 아산 등 수도권에 인접한 충남 동북부 지역에 충남 전체의 65.6%가 집중 분포하며, 대전 근교지역인 논산, 금산, 연기지역에 17.7%가 분포하고 있다. 즉,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인접 지역과 서산, 당진, 아산, 천안, 연기로 이어지는 충청남도 동북부지역에 집중되어 충남지역내의 지역간 경제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2) 산업단지

2000년 12월 현재 충남에는 국가산업단지 6개(20,764천평), 지방산업단지 21개(7,438천평), 농공단지 58개(2,743천평)로 총 85개(30,945천평)의 산업단지가 입지하여 전국대비 국가산업단지 16.7%(7.5%), 지방산업단지 13.0%(12.6%), 농공단지 9.3%(20.1%)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인 천안외국인전용공단, 고정국가산업단지, 아산국가산업단지는 조성이 완료되어 가동 중에 있고, 현재 대죽자원비축단지가 건설 중에 있다. 지방산업단지와 기타산업단지는 25개 단지에 33,674만m² 조성을 목표로 추진중이고, 완료된 단지는 천안 제1단지를 비롯하여 8개의 지방산업단지와 계룡왕대단지 등 3개의 기타산업단지에 197개 업체가 입주 가동중이다.

산업단지는 천안, 연기 등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주요 업종으로는 기계장비, 조립금속, 자동차트레일러, 석유화학 등이다. 농공단지는 총 58개이며, 9,130천m²에 605개 업체가 입주하였으며, 가동중인 업체는 488개, 휴·폐업중인 업체는 67개, 건축 및 준비중인 업체는 50개에 이른다.

충남의 산업단지는 북부지역인 서산, 당진, 아산, 천안과 서남부지역의 보령, 서천, 그리고 대전근교인 연기에 중소규모의 산업단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 산업입지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경쟁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함

으로써 과잉공급 상태이며, IMF 금융위기, 정부의 일관성 없는 수도권정책, 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 획일적인 공급방식으로 미분양상태의 산업단지가 많은 실정이다. 전국의 총 미분양면적은 3,181.4천평에 달하며, 이중 충남은 707.4천평으로 22.2%를 차지하고 있다.

1995년 이전에 추진되었던 비봉, 화성, 부여 등의 농공단지와 왕대준공업단지, 기업의 입지수요가 높은 천안, 아산, 연기지역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었으나, 석문, 장항, 인주 등 대규모 산업단지는 사업추진이 매우 부진한 상태이다. 석문국가산업단지는 국·내외 경기후퇴, 높은 분양가(46만원: 정부의 지원 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도 분양가를 낮출 수도 없는 상태임), 대규모 용지의 일괄분양방식(개별기업의 중소규모 입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곤란), 선분양 후개발방식(충남의 재정여건상 막대한 사업비 부담 초래)에 따른 기업들의 과도한 초기자금 부담 등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당분간은 단지조성이 어려운 형편이다. 장항국가산업단지는 대규모 임해산업용지의 수요부족 및 산업구조의 변화(첨단기술산업구조로의 변화에 따라 과거 중후장대형의 중화학산업구조로부터 이탈, 대규모 용지를 필요로 하는 자동차, 석유화학 관련 업종은 국내에서 이미 공급과잉 상태임, 국내경기 침체로 국내자본에 의한 대규모 용지수요도 기대하기 곤란한 상태임), 정부부처간 정책조정 미흡, 선분양 후개발 방식의 문제, 기반시설 등 입지여건의 불리성과 정부 관심 미흡(단지 진입도로, 철도, 고속도로, 항만시설 등 기반시설 미비), 그리고 장항·서천 등 배후도시가 성숙되지 못하여 생활여건, 노동력, 원자재 수송, 제품수요 등 대도시 주변지역에 비해 매우 불리한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연될수록 매몰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으로 작용하여 지역경제의 망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3) 인적자원

충남의 고등교육기관수는 24개, 학생수는 145,889명으로 전국대비 각각 6.9%, 4.9%로 인구의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고등교육기관이 분포하고 있다. 직업훈련기관은 공공훈련기관 5개, 훈련법인 1개, 노동부지정시설 4개 기타 85개로 총 95개의 기관이 소재하고 있고, 대부분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에 집중분포되어 있다. 현재 아산기능대학(아산시 신창면)과 강경기능대학(논산시 강경읍) 설립이 추진 중에 있다.

산업인력수급실태를 살펴보면, 신규노동력 공급능력이 2000년 현재 23,694명으로 이중 대학출신이 15,219명으로 64.2%를 차지하며, 이외에도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배출되는 산업인력과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는 인구(군제대자)를 고려할 때, 25,000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인력수요측면에서 도내 평균 인력 부족률은 3.39%로 전국평균 3.98%보다 다소 낮으나 생산직 인력 부족률은 3.85%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생산직 인력부족률은 전문가 4.15%, 기능직 3.98%, 단순노무직 3.94%, 기술직 및 준전문직 3.31% 순으로 나타난다.

산·학·연 연계체계 실태를 보면, ①지역의 과학기술 진흥과 지식기반화충을 위해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신기술보육사업(TBI),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②산학협력은 기초 및 응용기술분야에 흥익대(메카트로닉스 연구센터)와 10개 대학과 창업관련으로는 테크노파크(신기술창업보육센터)와 16개 대학, 연계 및 지원분야에 테크노파크와 2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③천안고등학교를 비롯한 14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1,884명의 학생, 공주영상정보대학 외 6개 학교가 주문식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지식기반경제하에서 지역경제의 성패는 고급인력의 확보와 효율적인 산·학·연 연계체계의 구축에 달려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산업인력정책이 중앙정부 주도하에 획일적으로 수행되어 지방 특성에 맞는 산학협력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국책과제는 주로 장기성 기술개발에 치중함으로써 지역의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자발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중앙부처간의 협력체계가 미흡함에 따라 규모의 경제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대학 대부분의 학생이 수도권 출신으로 산업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등 유인 체제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며, 지역에서 공급되는 고급인력의 역외유출이 심한 실정이다.

4) 물류·유통

충남의 물류시설은 2000년 현재 백화점 4개소, 대형점 3개소, 지정체인사업지점 3개소, 상설시장 30개소, 정기시장 52개소가 있으나 대형업체의 대부분이 천안에 집중되어 있고, 물류시설로는 일반화물터미널과 천안시에 위치한 농축산물 물류센터

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1996년 이후 유통시장의 개방이후 대형할인점과 대형유통업체들이 대규모의 자본과 제품의 다양화, 고급화를 바탕으로 경쟁적으로 진출함에 따라 지역의 영세한 재래시장과 슈퍼마켓을 잠식하고 있고, 또한 광역교통망이 발달하면서 주변 대도시로의 상권 이탈로 지역내 백화점, 정기시장, 재래시장 등 상류시설의 쇠퇴를 초래하고 있다.

항만시설은 그 동안 산업단지 및 발전소 전용항만 위주로 개발되어 일반화물처리를 위한 공용항만은 전무한 상태이며, 아산항 건설을 시발로 보령신항만, 대산항, 장군신항만 개발이 추진 중에 있으나, 물동량에 비해 물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물류비 상승으로 기업입지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무역항이 없는 충남의 입장에서는 국제교류·교역의 거점으로서 항만의 개발이 시급하나, 아산항, 장군신항, 보령신항, 대산항 등 충남의 거점 항만들 모두 투자우선순위가 낮아 사업의 추진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부권 내륙화물기지도 기본계획은 완료되었으나 민간사업 신청자가 없어 계획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중부농축산물 물류센터 또한 1999년부터 운영 중에 있으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자도입을 통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그 성공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의 평택항과 전북의 군산신항이 먼저 개발될 경우 충남의 항만개발 시기는 더욱 늦춰지거나 아예 주변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도로교통체계

충남의 도로연장은 1998년 현재 6,007.9km로 광역시 및 특별시를 제외한 도단위 중에서 가장 낮다. 도로등급별 전국의 총 도로연장과 비교할 때 고속도로는 78.5km로 3.9%이며, 일반국도는 1,190.8km로 9.6%, 지방도는 314.2km로 10.0%, 시·군도는 1,395.7km로 8.0%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간 연결기능을 갖는 국도는 남북축 9개, 동서축 6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어 남북축으로의 도로운영이 동서축보다 많으며, 이들 15개 노선은 총 1,190.783km가 충청남도 전 지역에 비교적 균등한 밀도로 배치되어 있으며, 충남지역의 국도는 고속도로의 대체기능과 함께 고속도로의 접근이 불량한 지역간 간선기능을 담당하나 그 정도가 미약하여 지역간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도는 대부분

왕복 2차선 도로로 교통량에 비해 도로용량이 부족한 실정이며, 일부 4차선 도로로 확장된 도로는 도로의 연속성이 떨어져 병목현상을 유발하고, 일부도로는 시가지내를 관통하여 운행속도의 저하와 더불어 교통혼잡의 주 요인으로 되고 있다.

4. 충남의 산업진흥계획

1) 지역혁신체제 구축

지역혁신체제는 지역내 산업의 강점과 약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내 각 기능의 집적을 통해 지역경제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시스템을 말하며, 종래의 투입요소에 의한 생산능력의 확충보다는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기술 및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주도형의 산업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충남의 지역혁신체계는 ①전자부품을 중심으로 한 전자·정보기기 산업군을 중심으로 정밀기기, 정밀화학, 자동차, 석유화학산업 등을 단계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전자·정보기기산업 중심의 허브-스포크 산업생산체계를 구축하고, ②산업생산-과학기술은 충남 테크노파크(기술 및 시장정보 제공, 마케팅전담기업 등 응용연구와 시제품 생산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산·학·연컨소시엄, 기술이전기관, 애로기술 해결기관(지역기술 혁신센터-중소기업의 현장애로기술 해결기관)을 네트워크화 하며, ③산업생산-기업지원은 산업단지공단, 지자체의 지원부서, 종합지원센터를 상호유기적으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과 지역내 핵심 주체들을 결집하여 지역산업발전을 기획추진하고 플랫폼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조정역할을 담당할 지역발전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2) 신산업 집적지 조성

지식기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생산, 두뇌인력, 정보기반 등의 연계강화 및 집적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시설 및 제조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식기반 집적지를 육성하고, 기업간 유연한 공동투자 및 공동생산, 계열체계를 구축하고, 동이업종간 협력 강화를 통해 산업연계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충남은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체제 구축과 이를 공간적으로 전개하는 북부 테크노벨트, 동남부테크노벨트, 서부테크노벨트의 3각 테크노벨트를 조성하여 자원

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기능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천안·아산을 주요 거점으로 하는 북부테크노밸트는 전자·정보기기산업과 반도체, 반도체제조장비, 디스플레이,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산업, 벤처종합지원단지인 천안밸리 조성, 인주공단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부품, 정밀기기, 메카트로닉스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연기, 공주, 금산, 논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남부테크노밸트는 중·소규모 벤처지구로 육성하고 벤처기업과 TBI를 졸업하는 기업을 중점 유치하며, 연기군과 논산시는 대덕연구단지의 배후에서 첨단산업생산을 담당하고, 기존 제조업의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고부가가치화하며, 공주시는 교육도시의 기능강화, 유구 섬유지구의 지원기능강화 및 교통의 거점이 될 우성면 주변에 통신·정밀기기의 집적지를 조성하는 한편 금산군은 기존의 인삼 및 약초생산, 유통지역에서 가공과 기술능력을 통해 건강·의약단지로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서산, 보령, 장항 등 서해안고속도로를 축으로 형성되는 서부테크노밸트는 정밀화학, 석유화학산업과 자동차산업 등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첨단산업의 생산기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지원기관을 확충하고, 장항국가산업단지와 대산항, 당진항과 석문국가산업단지를 묶은 아산만권 자유무역지구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 외국인투자유치, 국제무역의 진흥 및 지역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서해안고속도로 IC 주변(해미, 홍성, 광천, 주산, 서천)의 기업입지 수요변화에 따라 중소규모의 특화산업단지를 개발하는 한편 축산업(전국의 17%, 낙농품 재조업의 11%)을 활용한 동물자원 BIO사업화센터를 설립하여 고부가 가치화를 추진한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3) 산업인프라 구축

생산체제가 소품종대량생산체에서 다품종소량생산체제로 변하고, 대규모 장치형, 노동투입형 생산방식에서 전문중소기업간의 네트워크와 기술과 창의를 갖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간적으로 집적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전문중소기업의 공간적 집적지구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충남은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 등 광역교통망의 구축으로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기업체들의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앞으로 산업입지의 수요는 수도권 인접지역과 고속도로 IC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중소규모의 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선분양 후개발→선개발 후분양, 분양→임대,

자유무역지구지정 등 산업입지 공급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기존의 미분양 산업단지의 분양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도권과 영·호남을 연결하는 남·북축의 간선도로망 기능을 보완하고, 서해안과 내륙을 연결하는 동서축 및 X축의 광역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주~보령간 고속도로, 당진~천안간 고속도로, 보령~안면도 연륙교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환황해권의 해상물동량 처리를 위한 당진항의 분리지정과 대산항의 컨테이너 전용부두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4) 지역 인재육성체계 구축과 기업여건 개선

21세기는 지식·기술집약산업 중심의 지식기반경제사회로의 이행이 급진전됨에 따라 고급인적자원의 확보는 지역의 생존과 발전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충남은 연간 25,000여명의 신규산업인력이 배출되고 있으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장년층의 역외유출과 3D업종 기피현상으로 농촌에는 단순인력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인력수급의 문제는 지방으로의 기업이전을 꺼리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거점도시 조성 및 산·학·연 연계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고급인적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충남은 아산시 신도시개발지구에 시범교육단지를 조성하여 고급인적자원을 배출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종합대학타운으로 육성하고, 연합대학체제의 구축과 대학원대학을 유치하여 지역대학의 특성화를 유도, 세계적 수준의 지식생산벨트를 형성하고, 주문식교육, 예약입학제도, 인턴쉽제도 등 산·학간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들의 학습능력을 제고하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5. 결론 및 정책제언

현재 충남의 경제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충남지역의 개발부진 요인으로는 첫째, 의사결정과 예산권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사업추진여부를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둘째, 아산만권, 장·군광역권개발계획 등 국가계획에서 충남이 계획권역내

에 포함되어 있으나 개발사업은 이미 선도기업 또는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평택과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셋째, 당초 기대했던 수도권 등 외부로부터의 수요가 창출되지 못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고, 특히 IMF 금융위기 이후 더욱 위축된 상태이다.

또한 내적 요인으로는 첫째, 서북부지역과 장항 등은 산업기반이 약하고 수요가 부족함에도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어 실질적인 개발수요를 창출하지 못함으로서 사업추진기간이 장기화되었고 현재는 환경변화에 따른 계획의 수정도 곤란한 설정이다. 둘째, 하드 인프라 중심의 개발방식으로 여건변화에 신속적인 대응능력이 부족하였고, 셋째, 경쟁지역의 개발의도·추진에 대한 인식 및 대응이 미흡하여 정작 서해안시대가 도래했음에도 경기·전북지역에 선발이익을 빼앗김으로써 충남의 잠재력 실현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세계화, 정보화 등 외적인 흐름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지식기반경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산·학·연 연계체계 강화, 지역대학의 특성화 등 소프트한 프로그램위주의 정책이 필요하고, 둘째, 장기 미추진사업을 재검토하여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서해안지역의 개발 촉진 및 성장거점을 위한 기간사업 확충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기존 대규모 전략사업은 산업정책 및 지역개발의 전체 맥락 속에서 항만, 산업단지 등이 조성되도록 개발시기를 조정하고, 조속한 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지원 및 민간자본 확충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넷째, 충남내의 지역간 격차 완화에 정책적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즉, 수도권 주변지역인 서북부와 대전광역시 주변인 연기군, 논산시, 금산군은 기업의 유입 등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기타 지역들은 산업의 공동화뿐만 아니라 광역교통망의 발달로 주변 대도시 지역으로의 상권유출 등 지역경제가 쇠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별 차별화전략을 통해 내발적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과 지역간 지역개발투자협약제도,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제도 등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 박양호 · 이원섭, “지역개발투자협약제도 도입방안,” 국토연구원, 2001.
- 박양호 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의 추진평가와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2001.
- 손재식, “세계화 · 지방화와 한국의 지방자치,” 지방행정연구, 제9권 제4호, 1995.
- 이정식 · 김용웅, “세계화와 지역발전,” 국토연구원총서, 제3권, 국토연구원, 2001.
- 충청남도,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2000.
- 충청남도, “충청남도 산업진흥 실행계획,” 2000.
- 한무호, “지방산업인력 육성 및 공급방안,” 충남발전연구원, 2001.
- 통계청, <http://www.nso.go.kr>.